

공 개



의안번호	제 4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 15. (제 1 차)	

KB캐피탈(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1. 15.

1. 의결주문

KB캐피탈(주)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KB캐피탈(주)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KB캐피탈(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항 및 제3항, 제52조(과태료) 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1항,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항 및 제4항, 제72조(과태료) 등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2019.12.12.) 심의필

<별지>

KB캐피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KB캐피탈(주) : 과태료 4,200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검사착수일(2018.11.26.) 현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음

* 848,017건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 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1,189,268건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1)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2016.1.21. 및 2017.10.17. 최대주주(KB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주)○○○○○○○○○ 및 △△△△△△△△△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96,762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2)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2016.1.2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2016.1분기 ~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관 계 법 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5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_2. 개별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태료 금 액
가.~더. (생략)			
러.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제6호		1,000
머.~푸. (생략)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5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 3. (생략)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35.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2016.9.30. 법률 제14127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2016.9.30. 제27534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파. 법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6호	500
하.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7호	300
거.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7호	150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은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

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④ (생략)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시행 이전의 것)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 사.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 ④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라. ~ 마.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20>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개정 2013.12.20>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 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하며, 나.(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7.25>

가. ~ 나.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시행)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캐피탈(주)

2. 제재조치일 : 2020. 1.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4,20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검사착수일(2018.11.26.) 현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 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가)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2016.1.21. 및 2017.10.17. 최대주주(KB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주)○○○○○○○○○○○ 및 △△△△△△△△△△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96,762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나)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 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KB캐피탈(주)는 2016.1.2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총 4개 분기(2016.1분기~2016.4분기)에 대한 대주주 거래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3	02-3145-8803